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 강 녕*

목 차

- | | |
|--------------------|------------------|
| I. 서론 | IV.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 |
| II. 국제질서와 동북아 군사동향 | V. 결 론 |
| III. 북한정세와 군사위협 | |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질서와 동북아 군사동향, 북한정세와 군사위협,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오늘날 안보위협 변화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위협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동북아는 북핵문제, 역사문제, 영토 분쟁, 해양경계선 획정문제 등 세계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목표는 대남적화 전략으로서 김정일-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화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한국군은 동북아 현재적·잠재적 갈등, 그리고 국제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북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발위협을 고려하여 군사대비태세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능력과 대비태세를 구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두고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동북아 안보정세,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 국제질서, 북한, 선군정치, 한미동맹

* 조화정치연구원장, 정치학박사

I. 서 론

우리는 정보화·세계화·개방화·민주화로 압축되는 세계질서 또는 시대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정보통신과 교통의 혁명적 발달, 냉전체제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확산,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보편화, 환경문제의 전지구적 대응, 상호의존적인 세계문제해결의 필요성 등으로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세계화 현상은 점차 보편화·다양화·일상화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냉전시대에 비해서 복잡적이고 유동적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European Unity),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국제문제를 두고 협력과 경쟁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오늘날 국제질서의 모습은 다극화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²⁾

세계안보정세는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는 이념적 대립구도가 해소되고 국가간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이념과 체제문제로 인한 국가간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은 감소한 반면, 민족·종교·경제·자원·환경 등을 둘러싼 국지분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안보환경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테러, 해적, 자연재해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영토·자원·종교·인종문제 등 안보위협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괄적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적인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도 역내국가들 간의 상호교류와 다자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양안문제, 역사문제, 영토분쟁, 해양경계선 획정문제와 같은 갈등요인들과 함께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은 여전히 역내안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 특히 동북아는 최근 최초의 항공모함 ‘바라크호’를 갖게 된 중국, 자원에너지·군사력을 바탕으로 국력을 회복하여 정치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대외정책을 구가하고 있는 러시아의 부상,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 등으로 동북아를 긴장시키곤 하는 북한 등의 정세변화 등으로 인해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정보화·민주화 등의 추세와 세계적인 탈냉전의 여파는 남북한관계에도 미쳐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사회 내부 및 북한의 대남전략(‘선 남조선 혁명 후 공산화통일’로 압축되는)도 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1.6, p.22.

3)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12.31, p.12.

아직도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미관계의 핵심적 현안인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재래식 전력, 북한의 잦은 대남 무력도발 등은 우리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요인이자 남북관계개선의 한계 및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⁴⁾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불안 그리고 외교난이라는 대내외적인 난제들을 안고 있다. 북한정권은 인민들의 삶과 행복보다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우선시하며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반민족적 도발도 서슴지 않아왔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경제기반이 파괴해지고 주민들이 굶주리는 비참한 현실은 도외시한 채 핵실험(제1차 핵실험: 2006.10.9/ 제2차 핵실험: 2009.5.25)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2010.3.26)과 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 등 긴장조성과 업적쌓기용 무력도발 등을 통해 대내결속은 물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권력세습(the third-generation power succession)체제의 공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질서와 동북아 군사동향, 북한정세와 군사위협,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기로 한다.

II. 국제질서와 동북아 군사동향

1. 국제질서의 변화

1) 탈냉전적 국제질서

1989-1991년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냉전이 끝나면서 국제질서는 근본적인 재편과정을 밟게 되었다.⁵⁾ 냉전종식으로 20세기 후반 국제질서의 큰 축을 이루었던 양극체제(bipolar system)는 붕괴되고 동서진영 간 대립구도도 종식되었다. 냉전이 끝나면서 탈냉전기 과도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이념, 체제 간의 대립이 현저히 감소된 반면,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종식 후 동유럽 국가들을 휩쓴 자유민주주의 혁명의 결과 상당수의 공산권 국가들이 체제전환에 성공하고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시장경제(market economy)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추세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탈냉전의 국제질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냉전시대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⁶⁾

4) 김강녕, 『지구촌시대 남북한의 외교·안보·통일론』(경주: 신지서원, 2010.2), p.3.

5) Andrew Heywood, *Politics*(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7), p.402.

첫째는 냉전종식과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지도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탈냉전의 국제체제가 지닌 성격이 단극체제(uni-polar system) 또는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인지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다. 그러나 과거 냉전기의 미·소 초강대국간의 양극체제(bi-polar system)가 해체된 이후, 국제체제가 미국중심의 힘의 배분과 안정성을 추구해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실제로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미국중심으로 형성·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국제분쟁의 조정능력과 경제력과 군사력 등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국가역량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각종 수치로도 잘 드러나는데, 군사비를 살펴볼 때, 미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단일국가의 경제규모 및 자본보유량, 생산력과 소비의 규모, 자본의 조정력을 가진 국제경제력 역시 여타의 국가집단이 가지는 능력을 상회하고 있다. 무엇보다 리더십과 소프트파워의 측면에 있어서 미국은 그 스스로 또는 미국주도로 조직된 국제협력체를 중심으로 한 각종 국제문제의 해결능력을 표출해 오고 있다.

둘째는 탈냉전기에는 과거 냉전기의 국제체제의 주요 행위자와 갈등요인이 변모했다는 점이다. 냉전기의 국제안보의 문제가 국가단위와 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탈냉전이 도래하고 나서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와 집단들이 국제문제의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또한 과거의 국제문제의 갈등과 이슈가 이념과 체제와 같은 정치·군사적 요인이었다면 탈냉전의 국제사회는 경제적 이슈와 종교, 민족, 자원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다양한 수준으로 변모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보편 개념으로 전파되면서 그로 인한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행위자와 갈등의 요인들은 더욱더 복잡해졌다. 특히 안보 아젠다(security agenda)와 안보주체 역시 다양화되었는데 안보위협 주체 면에서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제관계에 전면으로 등장했으며, 기존의 안보 논의도 주로 영토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개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루는 다양한 수준의 비전통적인 모습으로 전개되는 등 냉전기의 단순성과는 크게 달라졌다. 종교분쟁과 인종청소, 자원분쟁, 폭탄테러,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s)이라는 새로운 안보요인도 생겨났다.

셋째는 탈냉전기에는 국제질서의 중심축의 변화가 수반되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를 지배해온 강대국 간 전략적 관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우선 냉전종식으로 미·러 전략관계가 재정립됨에 따라 유럽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워졌고, 그 결과 국제정치의 중심축이 유럽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와 일본의 안보역할증대 추구 경향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을 끌어안고 중

6)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6), pp.23-24.

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정치·군사적 팽창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조정이다. 현재 미국은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중국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갈등과 협력 속에 선부른 전면대결이나 충돌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미중관계의 전반적인 유화적 기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군비현대화 추세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중국이 인도양, 서태평양 지역까지 군사전략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의 경제교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⁷⁾

2) 21세기 세계질서의 특징

탈냉전시대도 2001년 9·11테러라는 충격적 사건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1년 9월 11일을 기점으로 미국은 세계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고 기존과는 다른 미국주도하의 국제질서의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는데,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리처드 하스(Richard N. Haass)는 9·11테러 이후의 시기를 모든 것이 달라진 ‘탈탈냉전기(post-post cold war period)’라 칭했고 히다카 요시키(日高義樹)는 그의 저서에서 “제4차 세계대전”⁸⁾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전 세계적 테러와의 전쟁(반테러 전쟁)을 선포하고 분쟁의 원인인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과 이라크(Iraq)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재건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중동의 평화 로드맵(roadmap)은 거듭되는 테러로 지체되고 이슬람권의 반미감정은 깊어지는 등 새로운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과 21세기를 시기적으로 단정할 수도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와 현상들을 단순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한정하여 인식하기도 어렵다.

오늘날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와 변화,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탈냉전의 일반적인 현상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것과 비전통적 문제, 국제관계와 정치에 있어서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문제가 함께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들이 공존하고 병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

7) 중국은 자국의 해양방어선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확장하고 있다. 동중국해는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문제인 센카쿠 열도(釣魚島·다오위다오)를 두고 충돌이 계속되는 지역이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남사군도(南沙群島)나 서사군도(西沙群島)의 영유권 및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2010년 3월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양 권역을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와 같이 주권·영토와 관계되는 ‘핵심 국가이익’이며,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선언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6), p.30.

8) 이정환 옮김, 히다카 요시키 지음, 『피할 수 없는 전쟁』(서울: 풀빛, 2003), p.253.

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1세기 국제질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냉전시대 강대국 간의 대결구도 대신 더 복잡적이고 다극적인 질서가 혼재한다는 점이다. 21세기 현재 국제체제의 극성이 단극성(uni-polar system)인지 아니면 다극성(multi-polar system)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국제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해결의 과정과 행위자의 양태를 종합해보면 새로운 국제질서 역시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국제체제는 행위자의 힘의 배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인도 등 국제정치에서 규모는 크지만 그동안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던 거대국가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의 쇠퇴가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부상인 것이다. 21세기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질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⁹⁾

첫 번째의 특징은 '복합성'(complexity)이다. 엄밀히 말해서 21세기의 신국제질서 역시 미국중심의 헤게모니(hegemony)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력과 힘을 가진 규모의 국가들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다원화·다극화된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것이 21세기 신국제질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정치·군사 이외의 경제, 산업, 금융, 사회, 문화와 같은 일부 측면에서는 힘의 분포가 미국 유일 주도로부터 분산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¹⁰⁾ 세계화와 시장경제 확산의 결과 신흥부상국,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경제성장에 다양한 민족적 관점의 분출은 정보혁명 덕분에 더욱 확대 재생산되고, 이들의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곧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서 갈수록 합의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미국이 여전히 초강대국이지만 혼자 힘으로 국제문제를 리드(lead)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의 영향으로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와는 다른 차원과 이슈,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1994년 국

9)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6), pp.25-26.

10)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펴낸 「Global Trends 2025」 보고서도 2025년까지는 국제질서가 더욱 복잡적으로 변하고, 미국이 여전히 초강대국으로 남겠지만 지금보다는 '덜 지배적인 국가'로 변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5년경 국제질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부상과 함께 세계화로 인한 경제발전, 인구 증가, 지역적 발전 격차 등으로 인해 더욱 다극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초국가적 안보 아젠다가 등장하는데, 식량, 에너지, 물 등이 고도의 신 전략자원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각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6), p.26.

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이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개념이다. 군사감축이나 군비축소 외에도 인권, 환경보호, 사회안정, 민주주의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진정한 세계평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국제연합개발계획은 인간안보의 요소로 평화와 안보, 경제발전 및 복지, 인권존중, 환경보존, 사회정의, 민주화, 군축, 법치, 좋은 정치 등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 사회적 안정, 환경권, 경제적 풍요, 문화권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¹¹⁾ 그리고 포괄적 안보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냉전종식 이후 안보위협이 다양해지고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안보의 고려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정치·군사뿐만 아니라 경제·환경·마약·인권·난민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안보위협으로 확장됨으로서 포괄적 안보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¹²⁾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국제안보의 위협요인도 변하고 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s)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며,¹³⁾ 전쟁의 상황에서도 전쟁의 유형이 과거처럼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의 양상을 첨단전과 비첨단전, 재래전과 비정규전, 혹은 기동전 대 게릴라전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다. 오늘날의 전쟁은 비정규전의 광기에 정규전의 파괴성이 더해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정치·경제·군사적 힘의 분산,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증대 등은 전쟁양상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행위자의 개입, 전통적·비전통적 분쟁의 경계를 허문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국가의 붕괴나 불안정은 대량살상무기 물질, 무기, 기술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하고 국제적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현재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hegemony)와 주요 국가들의 역할, 그리고 다극화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국제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국제체제는 '미국중심체제' 또는 '미국주도체제'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유럽연합(EU)의 영향력을 의미 깊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없는 국제정치와 시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

11) "인간안보," 『Naver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5620>(검색일: 2011.10.8).

12) 김강녕, 『국제사회와 정치』(경주: 신지서원, 2010.2), p.67.

13)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2010년 오바마 행정부)를 보면 21세기 국제안보의 핵심위협을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s)'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이브리드 위협이란 광범위한 능력과 위협 유형, 포괄적 스펙트럼이 특징이며, 전면전, 비전면전, 테러 및 범죄활동까지도 전쟁수단으로 포함하는 개념을 뜻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6), p.27.

나 다른 한편 이들 국가들의 협조와 지원 없이 미국의 독자적인 힘으로만 정치와 외교, 교역과 환율, 테러와 분쟁과 같은 국제문제의 요인들을 제어해 나가기도 어려운 국제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오늘날의 국제체제는 강대국에 의한 단극 및 양극의 체제, 혹은 다른 국가 또는 요소들에 의한 다극체제의 성격을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하자면 다차원적인 국제질서(multi-dimensional international order)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들은 다차원적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에 집중하는 '전통적 안보'의 방편인 군사적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이슈를 다루는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를 이해하고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함께 활용하는 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¹⁴⁾

2. 동북아 국제정세와 군사동향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최근 들어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문제가 있다. 중국은 2010년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에 오를 정도로¹⁵⁾ 최근 수년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해·공군력 증강 등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국력을 신장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적 위상은 크게 강화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유례없이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보여주면서 세계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는 기본적으로 냉전적 요인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군사비 증가율도 연 8%이상으로 연평균 3~4%인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동북아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했던 지역이었으며,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로 말미암아 동북아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2009.4.5)와 2차 핵실험(제1차: 2006.10.9/ 제2차: 2009.5.25)은 역내 안보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후에도 북한은 천안함 피격폭침 사건(2010.3.26)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11.23) 등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킨 바도 있다.

1) 미국의 정세와 군사동향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

14)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6), pp.27-28.

15) 조영갑,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 『국방일보』, 2010년 9월 17일자, 14면.

나 여기에 일본과 중국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도 과학기술, 석유와 가스 등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상황이다. 미국은 과거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 시절,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개입과 확대정책'(Engagement & Enlargement Policy)을 통해서 국익을 수호하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체제 유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 발전,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을 도모하여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역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였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관계 심화와 전략적 대립의 딜레마 속에서 일본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통한 중국의 견제, 동북아에서의 안보비용 절감 등을 도모해왔다.¹⁶⁾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추구하는 등 미국 주도의 외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9·11테러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의 반테러 전쟁에 영국·일본 등이 적극 공조하였다. 현재의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협력과 다자적 접근을 중시하며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목표로 기존 동맹국들과 국제기구와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필요에 따라 직접 대화와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를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와 군사, 경제력 등을 대외정책에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⁷⁾

우리의 맹방(盟邦)인 미국의 최근 군사정세 및 군사동향은 어떠한가? 미국은 전통적 위협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통적 위협과 더불어 비정규전·테러전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2월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정책구상을 밝힌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는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능력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투입·운용하는 전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 육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전쟁에 따른 병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해·공군은 아태지역(亞太地域)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전력증강과 더불어 동북아에 주둔한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2006년 5월 합의된 '미군 재편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주일미군을 재편하고 있다.

2) 일본의 정세와 군사동향

16)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6), pp.28-29.

17)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6), p.29.

일본은 경제대국 지위에 상응하는 정치·군사대국의 면모를 갖추려 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동맹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력 증강, 유엔 평화유지군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 참여, 자위대의 해외파병,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추진, 대외원조의 전략적 이용 등을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미·일 동맹체제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철저한 미일동맹 중심의 국익추구를 목표로 군사·외교·안보·경제정책 등을 구현해왔다. 지난 2009년 한때,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Hatoyama Yukio, 鳩山由紀夫) 정권이 출범한 이후, 미일관계의 일부 범위(환경, 비확산, 인간안보, 유엔개혁문제 등)에 대해서 독자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하토야마는 집권 시기에 자민당식 외교를 '굴종외교'로 비판하고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지원 중단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2010년 6월 출범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미일동맹에 대해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유지·강화시켜야만 하는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고 선언한 후, 미일동맹이 복원의 길로 들어서는 등 전통적인 미일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면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11년 8월 민주당내 3번째 총리로 민주당내 대표적인 우익인사인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가 새로운 총리로 선출됨으로써 간 나오토 총리의 미일관계개선 공약이 불투명해지고¹⁸⁾ 보수우익적 성향으로 한일관계의 경색이 우려된다는¹⁹⁾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의 군사동향은 어떠한가? 일본은 방위정책의 목표로 세운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효과적 대응, 외부의 침략에 대비,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평화협력활동 등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위대 전력의 합동운용성강화, 정보기능강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적 체제구축, 우수 인적자원 확보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7년 1월 방위청(防衛廳)을 방위성(防衛省)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일본은 안보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위대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자위대는 23만여명의 병력구조를 유지한 채 구형무기체계를 도태시키고 첨단무기체계를 증강하고 있다. 콩고(金剛, 7,250t)급 이지스함 4척 외에 신형 아타고(愛宕, 7,700t)급 이지스함 2척(1번함: 아타고, 2번함 아시가라), 아파치 공격헬기 6대 등을 최근 전력화했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따라 미사일방어(MD: Missile

18) "Japan's Latest Prime Minister," *New York Times*, September 4, 2011.

19) "일본의 새총리 선출과 역대총리 현황," <http://blog.naver.com/agentanet/20136770186>(검색일: 2011.10.9).

Defence) 체계의 조기구축에도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도쿄 인근 4개 항공자위대 기지에 지상배치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Ⅲ)을 배치했고, 같은 해 12월 해상배치요격미사일 스탠더드 미사일(SM-3)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을 하와이 근해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실시했다.²⁰⁾ 이외에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척씩 이지스함 3척에 요격미사일(SM-3)을 장착하였으며, 탄도미사일 감시와 추적을 위한 FPS-5 레이더를 설치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9년 3월 일본은 북한의 광명성 2호(대포동 2호) 발사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요격용 스탠더드 미사일 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동해상에 배치하여 일본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명령을 발동한 바도 있다.²¹⁾

3) 중국의 정세와 군사동향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조정이다.²²⁾ 현재 미국은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중국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갈등과 협력 속에 선부른 전면대결이나 충돌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미중관계의 전반적인 유화적 기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군비현대화 추세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중국이 인도양, 서태평양 지역까지 군사전략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양안의 경제교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²³⁾

지난 2011년 1월 19일 미·중 정상회담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원론적인 부분은 공감하고 있지만 자국의 민감한 이익이 걸린 부분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중은 2011년 1월 19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협력적·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군사·경제·무역·에너지·대테러 등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미·중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ed Program)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강조된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연평도 공

20) 이석중, “주변국의 군사동향,” 『국방일보』, 2009년 2월 24일자, 3면.

21) 최이락, “일·북 로켓 파괴조치 명령 발동,” 『연합뉴스』, 2009년 3월 28일자.

22) 오수열, 『미중시대와 한반도』 (부산: 신지서원, 2002); 오수열, 『강대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부산: 신지서원, 2004) 참조.

23) 중국은 자국의 해양방어선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확장하고 있다. 동중국해는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문제인 센카쿠 열도(釣魚島·다오위다오)를 두고 충돌이 계속되는 지역이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남사군도(南沙群島)나 서사군도(西沙群島)의 영유권 및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2010년 3월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양권익을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와 같이 주권·영토와 관계되는 ‘핵심 국가이익’이며,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선언했다.

격에 대해서도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군사동향은 어떠한가?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면서 군사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군사문제연구기구인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2007년 6월 11일 공개한 『2007 군비·군축·국제안보연감(SIPRI Yearbook 2007)』에 따르면 중국(495억 달러)이 4위, 일본(437억 달러)이 5위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이 이미 아시아 1위 군비지출국이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²⁴⁾

중국군은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 승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전략은 정보화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에 대비하여 첨단무기로 해·공군력을 강화하고, 적극방어로 승리하여 반침략·통일의 국방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육군은 신속대응능력, 해군은 원양작전능력, 공군은 장거리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육군은 공격헬기부대를 주축으로 한 육군항공단을 증설하는 한편, 기동전술미사일부대를 창설해 동남부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중국은 2007년 1월에 탄도미사일로 자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하였고,²⁵⁾ 같은 해 10월에는 달 탐사위성을 발사하고 우주정거장 건설계획을 세우는 등 우주개발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48,000t급 비핵동력 항모를 건설하고, 나아가 93,000t급 대형 핵추진 항모를 2020년까지 건조하여 전력화할 전망이다.²⁶⁾ 중국은 이미 세계 최첨단 스텔스기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J-10, J-12 등을 선보인 바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ce News)』(2007.3.12)에 따르면 201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J-13과 J-14를 자체 개발 중이다.²⁷⁾

이처럼 중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꾸준히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해왔다. 첨단무기체계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 잠수함능력 증강, 대함(對艦) 미사일능력 개선 등 해·공군력 첨단화를 통해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바라크급 항공모함의 시험 항해를 공개하고 '중국 항공모함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것이 그렇다. 중국이 항공모함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은 첫째, 정치적으로 강대국을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자부심과 위신을 고양하는 데 항공모함만큼 적절한 수단도 없다. 항공모함의 전략적 유용성과 중국 항모기술수준에 회의적인 일부에서는 중국이 정치적 효과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본다. 둘째, 지속적 경제발전에는 원거리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작전반경을 확대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요구되는 것이다.²⁸⁾

24) SIPRI, *SIPRI Yearbook 2007: Armament,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07.6.

25) 국방홍보원, "군사동향: 중국 킬러위성," 『군사저널』, 2007년 4월호, p.34.

26) "중국 항공모함, 정부 대책 뭉가(사설)," 『중앙일보』, 2008년 11월 19일자.

27) 김강녕, 『한반도 평화론』(경주: 신지서원, 2009.2), pp.96-97.

28) 이석수, "중국 항모시대...동북아 전략적 각축 예고," 『중앙일보』, 2011년 8월 16일자, 29면.

4) 러시아의 정세와 군사동향

탈냉전이 도래하고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는 자원과 에너지,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정치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대외정책을 구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에 합당한 지위와 외교적 자율성을 획득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 아시아에서도 중국 및 북한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며 동시에 한국·미국·일본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속에서 미국의 독주에 대한 견제, 무기수출, 상하이협력기구(SCO)²⁹⁾를 통한 중앙아시아의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주의'(Eurasianism) 노선 하에 실리와 안보 증시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개발을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현안에 대해서 전략적인 반대 또는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국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지만 또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입장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러시아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불신하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의 전략적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한 조치를 전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등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군사동향은 어떠한가? 러시아는 2008년 10월부터 미래안보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군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9년 5월과 2월 중·장기 국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2020』과 「군사독트린」을 개정 발표한 바 있다. 핵억제력 유지와 저강도 분쟁에 대비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 중점을 둔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해체 이후 세계초강대국으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하고,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신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미국에 이어 여전히 세계 2대 핵무기강국이다. 러시아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제고하는 한

29) '상하이협력기구'(SCO)란 1996년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이 참가한 가운데 상하이에서 열린 5개국회담에서 처음 거론되었으며, 200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여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정식 출범했다. 현재 이 기구는 정치·경제·무역·과학기술·문화·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6), p.31.

편, 군 구조를 개편하여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상전력분야에서는 재래식 전략미사일을 폐기하고 신형 유도장치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TOPOL-M)의 실전배치를 지속하여 2007년 12월까지 고정식 48기와 이동식 6기를 배치완료했다. 또 2015년까지 총 9개 연대에 TOPOL-M 미사일을 배치하여 핵 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2008년 9월 18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최신형 다중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불라바(Bulava, SS-NX-30, '철퇴'라는 의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³⁰⁾ 해상전력분야에서는 2007년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1번함이 북양함대에서 진수되었고, 2011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해 태평양함대에 배치하고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에 TOPOL-M 미사일을 해상발사용으로 개조한 불라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12기를 탑재한다는 것이다.³¹⁾

3.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

동북아 지역에는 전술한 역내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의 변화에서 파생하는 문제들 이외에도 몇 가지 불안정 요인들이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에는 남북한관계와 중국·대만관계 등 분단국의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쿠릴열도, 조어도, 독도 등 도서영유권분쟁과 자원문제를 둘러싸고 역내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중·일간의 조어도(釣魚島, 센카쿠제도), 그리고 러·일간의 쿠릴열도(또는 북방4도, 하보마이, 쿠나시리, 에토로후, 시코탄), 한·일간의 독도 등 도서영유권문제는 여전히 동북아의 잠재적 안보불안요인이다.³²⁾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나,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고, 이러한 위기는 경제성장 이면에 잠재되어 있던 국가 간 문제와 국가 내부의 사회적 문제라는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고 아시아의 경제파위가 급부상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각국 간의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자 비상이 걸린 각국은 동시다발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경제영토 확대전쟁에 뛰어들고 있다.³³⁾

셋째, 동북아 지역에서는 국가 간 갈등요인의 표면화와 경제력 향상을 통한 군비증강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항공모함의 시험항해를 실시함에 따라 '중국 항공모함시대'는 이제 주변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현실이 되었다. 일본은 중국에 항

30) 박경덕, "잠수함 발사 다탄두 핵미사일 러시아 시험발사 성공," 『중앙일보』, 2008년 9월 20일자, 14면.

31) 이석중(2009.2.24), p.3.

32) 김강녕, "동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과 독도문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ATEGY 21, Vol.1, No.1 (Summer, 1998), pp.160-182 참조.

33) 이병관, "동아시아 경제영토 새판짜기 뜨거운 경쟁," 『서울경제』, 2011년 10월 16일자.

모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으로 인한 해군력 강화경쟁은 ‘아시아의 화약고인’ 인도와 베트남 등 남아시아 국가는 물론 이란 등 중동에까지 번지고 있다.³⁴⁾ 동북아에서 항모능력을 포함한 해군력 경쟁은 한국에 심각한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³⁵⁾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대남무력도발을 위한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계속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세와 군사위협을 장을 달리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정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는 지역안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안보부문에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협력대화(NEACD) 등과 같은 협력조직이 있으며, 경제부문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있으나 구속력 있는 협력기구로는 아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기구 창설은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영토·국경분쟁 및 군비경쟁 등 안보 위협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제 협력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⁶⁾

요컨대 탈냉전 이후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 미국중심의 동맹강화와 함께 러시아의 재등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한국의 대내외 정책과 상호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 통일·안보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Ⅲ. 북한의 군사정세와 군사위협

1. 북한 정세

1) 대내

북한은 주체사상(Juche Ideology)과 선군사상(Military-First Ideology)을 내세워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노동당 일당독재체제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의 구조적 문제, 경제난 악화, 국제적 고립 등으로 체제 불안정이 가중됨에 따라 북한 정권은 선군정치노선을 강화하고 총역량을 결집하여 2012년 ‘강성대국 건설’(Building a Strong and Prosperous Socialist Nation)을 꾀하고 있다. 북한은 2008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후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대규모의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체제를 결속하

34) 장세정, “‘바라크 파고’...일본·인도·이란 ‘우리도 항모 건조,’” 『중앙일보』, 2011년 10월 4일자, 14면.

35) 이석수(2011.8.16), p.29.

36)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6), pp.32-33.

는 데 주력해왔으며, 2010년 9월 28일 44년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일 3남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체제를 공식화하고 현재 공고화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제한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제를 희생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2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로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고 국가재정난이 심화되어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의 존속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시행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 총동원방식의 경제회생노력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경제활동 위축, 민심이반 등으로 실패하여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본주의 등 외부 사조의 유입으로 주민들의 사상이 이완되고 정권에 대한 충성도 약화되었으며 집경지역 탈북자가 늘어나는 등 체제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김정일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주민동원과 사상학습 등 주민통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어서 체제불만세력이 김정일 체제에 저항할 만큼 조직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³⁷⁾

2) 대남

북한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내세워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대정책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대남강경정책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2008년 초반부터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사무소 우리측 당국자의 일방적 추방(2008.3.27),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2008.11.12),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차단(2008.12.1)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2009년 상반기까지 전면 대결태세 선언(2009.1.17), 정치·군사합의 무효화 선언(2009.1.30), 서울 불바다 발언(2010.6.12) 등 대남위협과 강경조치를 지속하였다.

북한은 2009년 하반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해소하고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대남강경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대청해전(2009.11.10), 서해 NLL(북방한계선) 항행금지구역 설정 및 해안포 사격(2010.1), 금강산 남측 자산동결(2010.6.12) 등의 도발과 강경조치를 자행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과 강경조치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2.5km의 우리 영해에 초계작전 중이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

37)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p.20-21.

하여 침몰시켰다.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전사한 이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고,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우리의 대북조치에 대해 전면전, 제3차 핵실험을 운운하면서 위협하였다.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연평도의 해병부대와 민간인 거주지에 무차별로 170여발의 포격을 자행하였고,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이 도발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일본·독일·영국·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 전역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핵개발을 포함한 대남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노력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³⁸⁾

3) 대외

북한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체제생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유엔안보리결의안 제1987호 채택과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 Tactics)을 구사하면서 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중단으로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되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Six-Party Talks)도 2008년 12월 이후 중단상태에 있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여 체제생존과 경제회생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宝) 중국총리의 방북, 2010년 5월과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등을 통해 중국과 전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북미양자회담을 통한 체제보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북핵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에 부딪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안보상의 전략적 이익확보와 경제적 실리획득을 위해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일본의 더 강화된 대북제재를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은 현재 역내국가들 이외에도 아프리카·중남미 등 비서방권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모색해 나가면서 유럽 국가들과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³⁹⁾

2. 북한의 군사적 위협

38)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p.21-22.

39)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22.

1) 군사전략과 군지휘구조

북한이 지난 2010년 9월 28일 44년 만에 '제3차당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30년 만에 개정한 「조선로동당규약」을 보면,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전전략을 의미하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는 규정을 전문(前文)에 명시해 놓고 있다.⁴⁰⁾

북한은 현재 '선(先) 남조선혁명, 후(後) 공산화통일'로 압축되는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을 고수한 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① 전국토의 요새화, ② 전인민의 무장화, ③ 군장비의 현대화, ④ 전군의 간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先軍政治)의 기치 아래 국가자원을 군사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명분으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주장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해왔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군사우선정책을 유지해왔으며,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는 선군정치(先軍政治, Military-First Politics)를 내세워 대남우위의 군사력 유지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의 기본목표는 대남적화통일로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권력세습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화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군은 기습전·배합전·속전속결을 요체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첨단전력과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 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의 비대칭전력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공격수단으로서 우리 군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의 군사지휘구조는 어떠한가?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로서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106조, 제109조). 김정일은 국방위원장과 당중앙군사위원장, 당정치국 상무위원을 겸직하면서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의 군사조직을 지휘·통제해왔다.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군 조직으로는 호위사령부와 보위사령부가 있다. 호위사령부는 김정일에서 김정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핵심시설 경비임무 등을 수행하고, 보위사령부는 반(反)김정일 세력을 단속하는 군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해왔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상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군수·행

40) 손재민, “노동당 규약 30년 만에 개정...대남적화 노선 그대로,” 『경향신문』, 2010년 9월 29일자.

정·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⁴¹⁾

2) 군사능력

먼저, 지상군(ground forces)의 능력은 어떠한가? 북한은 최근 군사적으로 경보병 부대의 증편과 야간·산악행군훈련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신형 지대지·지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개발과 잠수함(정) 건조 등 비대칭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⁴²⁾ 또한 지휘자동화체계 구축, 사이버전에 대비한 해킹전문요원 양성 등 현대전 능력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의·교란장비를 배치하고 공군 항공기의 지하발전기지를 건설하는 등 전시생존성 보장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물자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계획된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 9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11군단(구 정보교도지도국), 미사일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북방한계선 일대에 준비된 갱도진지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전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배치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집중사격이 가능하다.

기갑·기계화부대의 주축은 T-54/55 전차와 T-62 전차를 개량한 천마호 전차이며, T-72 전차를 모방한 신형전차(폭풍호)를 개발하여 작전배치했다. 신형 전차 배치에 따라 교체된 노후 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기동부대의 기동력과 타격력을 대폭 보장하여 작전적 융통성을 증가시키고 단기속전속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라크전 등에서 나타난 전쟁의 경험요소를 도출하여 북한군이 지닌 약점과 강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술을 구사해왔다. 이러한 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이미 경보병사단을 전방군단에 편성하였고 전방사단에 경보병연대를 추가 편성하는 등 특수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땅굴·AN2기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후방지역으로 침투 후 주요 목표타격·요인암살·후방교란 등의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한 주요 장비는 전차 4,100여대, 장갑차 2,100여대, 야포 8,500여문, 방사포 5,100여문, 도하장비(K-61/S형 부교) 3,000여대 등이다.⁴³⁾

다음으로, 해군(navy)의 능력은 어떠한가?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2개 함대사와 13전대 40여개 기지,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해군전력의 큰 변화는 없으나 잠수함 전력과 신형 어뢰 등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41)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p.22-23.

42) 대한민국 국방부(2009.1.19), p.25.

43)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24.

〈동북아연구〉

추정된다. 해군전력도 약 6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배치되어 있어서 기습공격이 가능하지만 독립된 해군작전보다 지상군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의 진출지원과 연안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어뢰정·소형경비정·화력지원정으로 구성된 수상전투단 또는 단독 함정에 의한 대함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상악화시 기동성이 약화되고 원해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상어급 잠수함과 연어급 잠수정 등 70여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뢰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임무 등을 수행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무기체계가 월등히 앞서는 우리 군함을 신형 어뢰로 공격하는 등 비대칭전력에 의한 전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상륙전력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건조된 공기부양정·고속상륙정 등 총 260여척과 소함정 30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저격여단과 해군정찰대대는 은밀히 레이더와 해군기지 등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상륙해안의 중요지역을 확보하여 대형상륙함이 필요 없는 단거리 기습상륙작전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해군이 보유한 주요 함정으로는 수상전투함정 420여척, 잠수함정 70여척, 상륙함정 260여척, 수해정 30여척, 기타 30여척 등을 들 수 있다.⁴⁴⁾

공군(air force)은 공군교육사령부 예하에 4개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 이후 도입한 항공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항공기는 매우 노후화되었으나, 신형 전투기 도입 등의 전력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공군은 전쟁 초기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우리의 방공자산, 보급로, 사업 및 군사시설, 국가기반시설 등을 타격할 것이다. 특히 AN-2기와 헬기를 이용하여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방공체제는 공군사령부 예하에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탐지부대 등으로 통합 구성되어 있다. 북한 영공은 4대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1차적인 방공임무는 비행사단에 위임되어 있다. 평양지역과 주요 군사시설지역에는 SA-3, 휴전선 일대와 해안지역에는 SA-2와 SA-5 지대공미사일을 다중으로 배치하였다. 전술 고사포는 지상군 기동부대를 방호하고, 전략 고사포는 주요 도시·항만·군수산업시설 등을 방호하기 위해 집중 배치되어 있다.

지상관제요격기지·조기경보기지 등의 레이더 운용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배치되어 있어서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부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 방공체제를 구축하여 대응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였다. 북한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에는 전투기 820여대, 정찰기 30여대, 공중기동기 330여대, 헬기 300여대, 훈련기 170여대 등이 있다.⁴⁵⁾

44)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25.

예비전력(reserve forces)은 어떠한가? 예비전력은 60만명의 교도부대(남자 17~50세, 여자 17~30세), 570만명의 노농적위대(향토예비군 성격), 100만명의 붉은청년근위대(중학교 군사조직), 40만명의 준군사부대(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군수동원지도국, 속도전 청년들격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세부터 60세까지 전인구의 30%가 전시동원대상으로 총 770만명에 달한다.

이 중 교도부대는 핵심 예비전력으로 편성과 훈련 면에서 정규군에 준하는 수준이며, 정규군의 장비현대화로 교체되는 주요 장비를 인수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 유사시 정규전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게 평소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⁴⁵⁾

전략무기(strategic weapons)를 살펴보자. 북한은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핵·탄도미사일·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영변에 핵시설을 건설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였다. 1980년대 이후 5MWe 원자로를 가동하여 얻은 폐연료봉을 2009년까지 4회에 걸쳐 재처리하여 약 4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2009년 4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개발을 시사한 이후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2,000여개를 가동 중이라 주장한 것으로 볼 때,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작전배치하였으며,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에 착수하여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에 대포동 2호를 시험발사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⁴⁷⁾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보고서는 대포동 2호 미사일에 대해 길이 35m의 2단계 미사일로 700~1,000kg의 탄두를 장착할 경우 사거리가 3,750km이지만, 3단계 로켓이 추가되면 사거리를 6,700km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까지 모두 20기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4월 영국의 세계적 군사컨설팅업체인 제인스 그룹(Jane's Group)이 발간한 『제인스 국가별 안보평가보고서』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관련하여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600~800기, 노동미사일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 150~200기, 기타 50기의 장거리 미사일 등 1,000여기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⁸⁾

45)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26.

46)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27.

47)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p.27-28.

48) "2006년 대포동 2호 20기 생산," 『국방일보』, 2009년 3월 5일자, 7면.

북한은 2,500~5,000톤의 다양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분산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탄저균·천연두·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전쟁지속능력과 군수동원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북한은 300여 곳의 군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시전환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에 전시동원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갯도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2~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추가 구입과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이다.⁴⁹⁾

IV.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

국가이익은 국가의 안전보장, 번영과 발전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어떠한 안보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지향해야 할 가치를 의미한다. 우리 정부가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① 국가안전보장, ②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③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④ 한반도의 평화통일, 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의 기여 등은 우리의 중요한 국가이익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중에서도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⁵⁰⁾ 또한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목표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국민안전보장 및 국가번영기반 구축,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로 설정해놓고 있다.⁵¹⁾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안보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① 국내안보(국민통합과 안보의식 강화), ② 대북안보(북한의 위협적인 재래·전략무기와 대남전략의 무력화), ③ 대주변국 안보(중·일 등의 군비증강,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왜곡, 일본의 일제침략 미화와 독도도발 등의 대비), ④ 대테러안보(대테러전 참전에 따른 테러세력으로부터 안전유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우리 스스로 이룩해야 할 국내안보만을 제외하고는 대북안보·대주변국안보·대테러안보에 있어서 공통분모는 한미동맹이라 할 수 있다. 지난 60여년간 한미동맹은 한국안보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왔으며,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억제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세력으로 오랫동안 기여해왔다. 또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과 같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에 참여하여 공동 대처하고 있다.

먼저, 대내안보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 그리고 특히 2000년 6·15공동선언

49)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p.28-29.

50) 대한민국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12.29, pp.27-28.

51)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32.

이후 남북교류협력증대를 통해 남북한관계가 개선된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거나 북한 핵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것도 사실이다. 안보는 '건강'과도 같고 '산소'와도 같은 것이어서 유사시 언제라도 북한과 주변국의 현재적 잠재적 위협 및 테러리즘의 위협을 예방·방어·억제할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안보의지와 안보역량의 대비·강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북안보를 살펴보자. 북한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과 같은 '서울 불바다' 위협적인 재래식 전력의 전방배치에 더하여 핵·미사일 및 화생무기와 같은 전략 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함으로써 동북아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도 저해요인이 되거나와⁵²⁾ 북한의 재래식 및 핵무기로부터 어느 국가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거나 불모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핵개발은 위협 이상의 수준이다. 북한은 핵보유카드를 이용한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 Tactics)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내되, 여의치 않으면 즉각 핵무기 개발 보유의 기정사실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이다.⁵³⁾

북한은 향후 군사력 건설은 남북한관계 및 주변강대국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재래식 군사력과 전략무기분야의 전력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주변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전략무기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증강과 함께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기동성 및 기습공격능력에 중점을 두고 첨단화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⁵⁴⁾ 또한 북한이 최근 비대칭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되, 이와 함께 북한이 군사적으로 양적 우세를 유지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전력을 개발·구축한다든지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여 대북억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천안함 폭침(2010.3.26) 및 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 등에서 보듯이 북한내부 결속 및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업적쌓기용 대남무력도발이 앞으로도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대주변국안보는 어떠한가? 동북아 정세는 탈냉전 이후 경제적 의존성 증

52) 김강녕, 『국가안보와 평화통일』(부산: 신지서원, 2005.8), p.115.

53) Glenn Kessler, "U.S. Believes N. Korea Rapidly Seeking Stockpile," *The Washington Post*(February 1, 2003).

54) 길병욱, "국제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국군의 발전방향," 『건군 60년: 건군·성장·현재·미래』(한국정치학회·아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5.11.4,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p.184.

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이해상충으로 경쟁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전술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영토 및 도서영유권분쟁,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역사문제(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왜곡, 일본의 일제침략 미화와 역사왜곡) 등 다양한 분쟁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미·일의 견제가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추진으로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군사력 질적 개선을 통한 강대국 위상회복 노력을 보이고 있다.⁵⁵⁾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과 일본의 독도도발(獨島挑發)등이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동북아 정세나 군사동향을 무시하고 대북안보에만 급급하거나 안주해서는 결코 안되며, 이보다 오히려 대주변국에 대한 방위충분성(defense sufficiency) 전력의 확보를 통해 대북안보는 그 안에서 부수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우세한 국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주변국들은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을 통해 첨단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바, 우리도 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도 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 미국의 대테러전에 참여하고 있고 테러리즘으로부터 예외지역도 아닌 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테러안보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9·11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은 사살되었지만 테러와의 전쟁과 그 희생은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2009년 3월 15일 우리나라 관광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테러가 예멘에서 발생하기도 했다.⁵⁶⁾ 미국의 대외정책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ism), 핵시대의 숙원인 ‘핵확산방지’(nuclear nonproliferation), 그리고 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변환/해외주둔미군 재배치구상’(military transformation and global posture review) 등을 기본축으로 하여 전개되어왔다.⁵⁷⁾ 더욱이 북한은 미국의 전술한 3가지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이미 국제화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주변강국들의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되어가는 추세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관계는 점점 더 강대국간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추세이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 및 핵확산방지를 기본축으로 하는 현 국제질서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등과 같은 비군사적

55) 국방부, 『자주국방과 우리의 안보』, 2003.12.2, p.4.

56) 조흥제, “테러대책이 없는 나라,” 『조선일보』, 2009년 3월 26일자, 35면.

57) 김강녕, “한미동맹의 발전과 향후 과제,” 육군본부, 『군사연구』, 제121집, 2005.11.30, p.295.

위협,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 즉각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⁸⁾ 국가의 여건과 가용재원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대북 ‘자주적 전쟁억제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주변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충분성 전력’⁵⁹⁾을 구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2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핵 위협을 줄이거나 대비하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과 같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 전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 대해 다양한 정찰 및 감시 수단과 한미연합정보자산을 운용하여 24시간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북한군과 그 밖의 위협세력의 동향을 분석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실시간에 전파할 수 있는 정보유통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⁶⁰⁾

V. 결 론

탈냉전 이후 오늘날 국제정치의 중심축이 유럽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으로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은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과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북핵문제, 양안문제, 역사문제, 도서영유권 분쟁 등 잠재적 갈등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요인 이외에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군사력 증강 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동북아는 동북아 자체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안보위협이 다양해지고 포괄적 안보가 강조되고 있지만, 탈냉전적 국제사회에서도 군사력(military power, military force, military strength)은 강대국 국력의 핵심적 요소로서 그 수단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동북아 국가들간에는 군비경쟁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고 폐쇄정책을 지속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력을 개발하며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기회라고 판단할 때마다 무력도발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국의 군비증강 및 군사혁신에 따른 군사정세 변화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58) 대한민국 국방부(2006.12.29), p.51.

59) 방위충분성 전력이란 적의 침략행위와 일방적인 자국의 국익강요를 저지할 수 있으면서도 적의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만한 정도의 방위적 군사력을 말한다.

60) 대한민국 국방부(2006.12.29), p.51.

에 대비한 국가안보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우리의 튼튼한 군사력의 건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단·중기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장기적 견지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정착을 거쳐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이 점차 사라져가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동북아 지역 내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요인으로는 강대국들간의 국익 경쟁 및 영토분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초국가적 테러위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국방안보역량을 길러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미래의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국가의 생존, 번영,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확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는 미·일·중·러 주변4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으로, 이들 4국은 남북한을 그들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좋을 때는 좋겠지만 유사시 이들 국가 사이의 이해충돌로 6·25전쟁처럼 남북간의 충돌을 유발시킬 가능성이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역사상의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처럼 주변국 상호간의 충돌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포함시켜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안보정책은 종래 대북위주의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함께 전방위 개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군은 '방위충분성'(defense sufficiency)전력 개념에 입각해 완벽한 국방태세와 '자주적 선진국방'을 실현하는 21세기형 선진화된 정예강군을 건설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남북통일과 동북아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국제공조 차원에서 주변국들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불특정 잠재적 위협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함께 구비해 나가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향후 우리 군은 ①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감시·정보·정밀타격전력의 확보 및 질적 개선을 통한 북한 군사력의 양적 우위를 극복하고, 특히 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② 미래의 불특정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의 침략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화·과학화된 전력구조로 발전시키며, ③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각종 무기체계의 국외 도입을 최소화하고,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추진하며, 국외 도입부품의 국산화 촉진과 수출을 고려한 소요를 적극 창출해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자력방위), 한미동맹, 대외군사관계 발전의 슬기로운 조화 속에서 우리 군의 위상과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다 안전한 세계,' '보다 잘사는 세계,' '보다 푸른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합되는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국내외의 위협

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차근차근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세계는 다양한 갈등요인의 분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위협적이고 현시적인 적(敵)인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남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는 한편,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대남무력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변국의 정세는 물론, 북한의 기도와 군사적 위협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다양한 군사·외교적 대응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경제적 능력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전략개발과 능력배양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⁶¹⁾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남북대화과 교류협력은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안보 속의 통일'과 '통일 속의 안보'의 조화를 함께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자주국방과 우리의 안보』, 2003.12.2.
- 국방홍보원, “군사동향: 중국 킬러위성,” 『군사저널』, 2007년 4월호.
- 길병욱, “국제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국군의 발전방향,” 『건군 60년: 건군·성장·현재·미래』(한국정치학회·아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5.11.4,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 김강녕,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경주: 신지서원, 2010.8).
- _____, 『지구촌시대 남북한의 외교·안보·통일론』(경주: 신지서원, 2010.2).
- _____, 『국제사회와 정치』(경주: 신지서원, 2010.2).
- _____, 『한반도 평화론』(경주: 신지서원, 2009.2).
- _____, “한미동맹의 발전과 향후 과제,” 육군본부, 『군사연구』, 제121집, 2005.11.30.
- _____, 『국가안보와 평화통일』(부산: 신지서원, 2005.8).
- _____, “동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과 독도문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ATEGY 21, Vol.1, No.1 (Summer,1998).
-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12.31.
- 대한민국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12.29.
- 박정덕, “잠수함 발사 다탄두 핵미사일 러시아 시험발사 성공,” 『중앙일보』, 2008년 9월 20일자.
- 손재민, “노동당 규약 30년 만에 개정…대남적화 노선 그대로,” 『경향신문』, 2010년 9월 29일자.
- 오수열, 『미증시대와 한반도』(부산: 신지서원, 2002).
- _____, 『강대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부산: 신지서원, 2004).

61) 김강녕,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경주: 신지서원, 2010.8), pp.78-90.

<동북아연구>

- 이병관, “동아시아 경제영토 새 판짜기 뜨거운 경쟁,” 『서울경제』, 2011년 10월 16일자.
- 이석수, “중국 항모시대…동북아 전략적 각축 예고,” 『중앙일보』, 2011년 8월 16일자.
- 이석중, “주변국의 군사동향,” 『국방일보』, 2009년 2월 24일자.
- 이정환 옮김, 히다카 요시키 지음, 『피할 수 없는 전쟁』 (서울: 풀빛, 2003).
- 장세정, “‘바라크 파고’…일본·인도·이란 ‘우리도 항모 건조,’” 『중앙일보』, 2011년 10월 4일자.
- 조영갑,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 『국방일보』, 2010년 9월 17일자.
- 조흥제, “테러대책이 없는 나라,” 『조선일보』, 2009년 3월 26일자.
- 최이락, “일·북 로켓 파괴조치 명령 발동,” 『연합뉴스』, 2009년 3월 28일자.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1.6.
- “2006년 대포동 2호 20기 생산,” 『국방일보』, 2009년 3월 5일자.
- “중국 항공모함, 정부 대책 뭉가(사설),” 『중앙일보』, 2008년 11월 19일자.
- Heywood, Andrew, *Politics*(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7).
- “Japan’s Latest Prime Minister,” *New York Times*, September 4, 2011.
- Kessler, Glenn, “U.S. Believes N. Korea Rapidly Seeking Stockpile,”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 2003).
- SIPRI, *SIPRI Yearbook 2007: Armament,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07.6.
- 『Naver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5620>(검색일: 2011.10.8), “인간안보.”
- “일본의 새총리 선출과 역대총리 현황,” <http://blog.naver.com/agendanet/20136770186>(검색일: 2011.10.9).

《Abstract》

Today's Changing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ROK's Responsive Strategies

Kim, Kang-Nyeong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oday's changing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ROK's responsive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is to search for international order and Northeast Asia's military trends, North Korean situation and military threat, and ROK's responsive strategies in relation to military security etc.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ilitary threats, the nature of today's changing security threats can be summed up as being complicated and multifarious due to the increase of transnational and non-military threats. The multifarious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cross-strait issue, the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maritime demarcation line issues in Northeast Asia demonstrate that Asia suffers more from disputes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North Korea has been concentrating on its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WMDs, special forces, long-range artillery, underwater forces and cyber attacks, while selectively increasing its conventional weapons. The basic national goal of North Korea is 'unification of two Korea under communist control, which is unlikely to change as long as the current Kim Jong-il and the Kim Jong-eun regime retains power.

Therefore the ROK forces should supplement its military readiness postu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potenti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threats from international terrorists, and the diverse and complex threats from North Korea. To effectively prepare for these threats, the ROK military has to equip itself with immediate response capabilities and a readiness posture, while maintaining a close coordination system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OK-U.S. Alliance has steadily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over the past 60 years, has contributed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ROK-U.S. Alliance should,

〈동북아연구〉

based on its shared values and trust, continue to develop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Key Words: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ROK's Responsive Strategies in Relation to Military Security, International Order, North Korea, Military-first Politics, ROK-U.S. Alliance

투고일 : 2011.10.24 / 심사일 : 2011.11.25 / 심사완료일 : 2011.12.25